

전북도민 예산감시단 구성

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 한계로... 감시 강화키로

전북도는 19일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민 예산감시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력이 잘 되지 않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다각적인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산낭비 근절 등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도민 예산감시단은 주민 관계망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한다.

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 봉사 성격으로 운영되며 각 시군별 주민참여 예산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 퇴직공무원 등 예산관련 유경험자를 활용하게 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돼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소환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한 전북 도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감시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도는 공개 모집을 통해 감시단을 선발한다. 감시단은 예산낭비 신고관련, 민원처리적정여부, 신고사항 현장조사 재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그동안 전북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예산 이해부족으로 단순 민원성 신고가 많고 제도개선 관련 신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예산감시단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접수-조사-결과 통보-사후관리'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북 도민이나 예산감시단이 전북도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관련부서에는 자료조사는 물론 감시단과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예산낭비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결과는 30일 이내 신고인에게 조치내용, 제도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과 표창 등을 실시하여 신고유인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밀월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도 차원의 강력한 관리가 중요하다.

보조금 관리 운영 실태와 부정수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예산

낭비신고센터 운영 직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각종 주민단체 등에 부정수급 주요사례 등 제보방법을 교육하고 주민 자율감시를 적극 지원한다.

전북도는 예산낭비신고 관련 절차 등 근거마련을 위해 「전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주요사업별 예산낭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낭비사례로 자주 지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숙지

전북도, 내일 민방위의 날 맞아 화재대피 훈련

전북도는 21일 오후 2시에 제406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제천, 밀양 화재 참사 후 화재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 내 주민 대피와 화재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를 위해 전국 화재대피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훈련엔 소방차 길터주기 긴급출동 훈련의 실천감 향상을 위해

교통통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앙부처 책임 하에 기관별로 시범훈련이 실시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적극적인 훈련 참여, 화재대피 훈련을 통해 화재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훈련기관은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대비책을 마련해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김선기 전북연구원 원장 취임

전북도는 제7대 김선기(재)전북연구원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선기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도시계획 석사와 행정학 박사 취득했고 이후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부원장, 석좌연구원 등을 거쳐 30여년간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분야에서 근무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전북연구원이 전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 연구운리를 지키고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창의적 연구,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책에 직결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신임 전북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1년 3월 18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오늘 공개되는 '대통령 개헌안' 무슨 내용 담기나?

'5·18' 등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은 ▲20일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사항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 순으로 발표된다.

세차례 나뉘어 공개되는 이유는 방대한 개헌안을 주제별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개헌을 추진하는 설득에 힘을 실고 여야의 조속한 개헌 합의를 유도한다는 목적도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지난 13일 청와대에 보고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 무난히 반영될 부분이다.

대통령 개헌안 공개의 마지막 순서인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가 큰 화두로 포함될 전망이다.

자문특위는 헌법 개헌이 다음 대선에 출마해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지난 13일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자문특위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고 '4년 중임제'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 발의안에는 '대통령 중임제'로 명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헌법 개헌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선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그 뒤의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어 대통령 연임제와 큰 개념 차이가 있다. 대통령 연임제는 헌법 개헌이 재선 패배 시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4년 연임제 개념으로 대통령 발의안에 무난히 담길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임제는 대통령을 한번 했던 인물이 여러번 재입할 수 있다는 뜻인데 문 대통령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면서 "미국 대통령처럼 재선에 승리할 경우 한번 더 재입할 수 있는 4년 연임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통령의 권력 분산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조정,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물론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이 자문특위 자문안과 달라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최종 검토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문특위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돼 복수로 올라온 안건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발의안을 가다듬는 작업은 마지막까지 한다"면서 "이후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은 확정안이다. 발의안을 통해 철회하지 않는 이상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

20일 첫날 공개되는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사항'에서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이 1960년 4·19혁명 정신과 함께 명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광주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및 노동권 화두와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등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발표될 대통령 개헌안 두번째 주제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에서는 수도를 법률

수도조항 추가 참여정부 불발된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성
권력구조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개헌 패배시 재출마 불가
국회의원 소환제·감사원 독립·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도

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켰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헌법 122조보다 구체화된 토지공개념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개헌 자문안에 담겼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이번 개헌의 중요 목적 중 하나로 토지 소유나 집중, 불균형 부분들이 우리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감대

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도(首都)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조항은 자문안 헌법총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강에는 수도를 명시하지 않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도조항이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험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받을 수 있다.

자치분권 강화 부분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시키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내는 '국민발안제'도 대통령 발의안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